(2005. 4.28, 목, 서면보고자료, 산업정책비서관실)

교토의정서 관련 컬럼 분석 및 의견 보고

1. 보고경위

□ 교토의정서 관련칼럼(중앙일보, 4.8)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견을 보고할 것을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심

"'교토의정서 관련 칼럼'에 대하여는 경제보좌관, 과학 보좌관, 경제수석실, 사회수석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의견을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."

< 칼럼 요지 : "교토의정서 안 따르는 나라 점점 는다">
○ 교토의정서에 따르지 않겠다는 미국 입장에 호주, 중국 등 주요 APEC 회원국과 브라질, 인도 등 개도국이 동조
→ 의정서를 지지하는 EU와 반대하는 APEC으로 입장 구분
○ 호주는 실제 교토의정서에서 탈퇴, 일본에서도 산업계를 중심으로 탈퇴를 요구하고 있으며, 경제산업성도 정책전환을 검토중

□ 경제정책비서관 주재로 실무회의를 개최(4.12. 회의록 별첨)하고 **주일본·중국·인도 대사관을 통하여 교토의정서에 대한 주재국*의 입장을 공식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림**

* 현지 대사관에서 일본(외무성 기후변동실), 중국(외교부 조약법률사), 인도(환경부, 기후변화과)의 교토의정서 담당관을 직접 접촉

2. 교토의정서에 대한 각국의 최근 입장

가. 교토의정서 발효 경위

□ '92년「Rio 세계환경정상회의」에서「UN기후변화협약」채택

* 현재 189개국 가입, 우리나라는 **93.12월 비준** (※ 선언적 규정)

□ '97년 국가의 감축의무를 규정한 「교토의정서」가 채택되었으며, '04.2.16일 러시아 비준으로 정식 발효

○ 선진국(38개국)은 1차 이행기간('08~'12)중 90년 대비 평균 5.2% 의무감축

○ 우리나라는 02.11월 세계에서 97번째로 비준
-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이행기간 중 감축의무 없음

□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주요 현안

○ 선진국에 부과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실질적으로 효력 발생

○ 제2차 이행기간('13~'17)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금년말부터 시작될 예정

나.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각국의 입장

□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각국의 최근입장이 종전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

○ 미국은 '01.3월 부시 대통령이 교토의정서 비준 불가를 선언하였으며, 호주도 비준을 거부하는 종전 입장 고수

* 미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보장되는 신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(2004.12, 10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)하면서, 수소연료 기술개발 등 장기적인 추진 강조

○ 중국, 인도는 교토의정서의 정신과 목적을 지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지만, 2차 이행기간중 의무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(4.21, 중국 외교부, 인도 환경부 담당관 면담결과)

○ EU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의무부담 국가를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 고수

* 독일은 동독 노후설비 개체만해도 감축목표 달성 가능, 영국은 CO_2 발생이 적은 천연가스 사용비중이 높음

(2005. 4.28, 목, 서면보고자료, 산업정책비서관실)

□ 칼럼에서는 일본의 입장변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으나, 일본 외무성 담당관(4.22일 면담결과)은 교토의정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, 그러한 논의 조차도 일절 없다고 강하게 부인

* 일본 산업계 등에서 탈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

3.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대책 추진현황

□ 「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」를 가동하여 3차에 걸쳐 종합적인 대응대책을 수립·추진 중

※ 제1차 종합대책('99~'01) : 부문별 감축사업, 감축기반 구축사업, 기술개발 사업 등 36개 과제

※ 제2차 종합대책('02~'04) : 협상역량 강화,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사업, 대국민 홍보사업 등 84개 과제

※ 제3차 종합대책('05~'07) : 협상이행기반 구축사업,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사업, 적응기반 구축사업 등 90개 과제

□ 금년 온실가스 배출통계 구축 및 배출권 거래제 시범실시, 분야별 감축사업 및 2차 의무기간중 협상대책 수립 등을 중점 추진 중

4.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

□ 현재로서는 교토의정서에 대하여 각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,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의 동향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대책 수립에 반영할 사안임

□ 기후변화협약 관련 업무를 총괄·조정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재외공관 등을 통하여 각국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, 2차 이행기간 중('13~'17) 감축의무협상에 철저히 대비토록 조치

⇒ 정책실에서는 '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'을 단위과제로 설정하여 각국의 동향과 협상대응체제 구축 등 대책추진상황을 점검·관리해 나가겠음